

## 2022년 제 1 차 정책자문위원회(근로복지분과) 회의록

일 시	'22.7.22(금) 14:00~	장 소	건설근로자공제회 15층 회의실
회의안건	<b>1. 위원장 선출</b> <b>2. 발제문 논의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1주제 : 퇴직공제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 (발제자 : 김명수 교수)</li> <li>- 제2주제 : 건설업 특수고용 노동자의 건강진단 (발제자 : 김세영 교수)</li> </ul>		
회의내용	<b>1. 위원장 선출 : 신영철 위원</b> <b>2. 발제문 논의</b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b>제1주제 퇴직공제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</b>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div style="display: flex;"> <div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text-orientation: upright; padding-right: 10px;">논의내용</div> <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<b>신영철 위원장</b> : 공제부금 일액 정률제는 건설사업주의 동의와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향후, 법률 개정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제출, 발제문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■ <b>안홍섭 위원</b> :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제도의 여러 가지 보완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</li> <li>■ <b>나경연 위원</b> : 근로자 복지 형평성은 다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. 정규직에 비해 불이익은 보장하되 초과하는 부분은 반발이 예상됩니다. 추가적으로 퇴직공제부금비가 간접비로 구분되는데 선진국과 같이 직접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</li> <li>■ <b>김세영 위원</b> : 공제회 역량은 건설근로자 DB관리에 있습니다. 현재, 건설근로자 산재는 퇴직공제와 일용근로내역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. 따라서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더라도 공적기관에서 DB관리가 계속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.</li> <li>■ <b>송주현</b> : 근로기준법은 상용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 적용 제외 근로자는 특례로 적용하는 상황입니다. 예를 들어 건설노동자를 근로기준법에 포함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. 이를 통해 건설노동자는 모두 동등해야 합니다. 또 한가지는 퇴직공제 누락입니다. 노동자가 일하고 적립되지 않는 누락이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확대 적용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.</li> <li>■ <b>김판기 위원</b> : 20억원 미만 공사가 전체공사의 95%를 차지합니다. 그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방안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.</li> </ul> </div>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b>제2주제 건설업 특수고용 노동자의 건강진단</b>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div style="display: flex;"> <div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text-orientation: upright; padding-right: 10px;">논의내용</div> <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<b>김판기 위원</b> : 비용은 안전보건기금 또는 안전관리비로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. 기관 운영 비용이 더 크다보니 유불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뿐만 아니라 공단과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.</li> <li>■ <b>김명수</b> : 연간 2천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, 자원 마련방안, 운영기관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</li> </ul> </div> </div> </div> </div>		
기 타			